

현안과 과제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신통치 전망
<첨부>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추정

Executive Summary

□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신통치 전망

■ 추모 기간(사후 1년)의 북한 정세 전망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 메움과 후계자 지위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 당중앙위원회 수반(총비서 의미)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후계자와 최고 권력임을 대내외 선언하였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김 부위원장 중심의 새 지도부를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추모 기간의 북한 체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가 유지되면서 후견인 그룹과 유신통치가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조기 안착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인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 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김정은 시대 개막과 유신통치 전망

(정책 기조)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내부 체제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신통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유신통치 기간은 이전의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신통치 전망)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의 진입을 위해 북중 경협과 외자유치 확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 개혁·개방 확대, 과학기술 발전, 주체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민족경제 건설 등을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대외원조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을 위해 핵협상에 나설 것이나, 체제 보장과 경수로 건설 등의 평화적 핵개발 이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실리 추구를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긴장 고조를 통한 주도권 경쟁, 위기 관리 차원에서의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한 군사적 도발 등이 우려된다.

■ 시사점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

2012년은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시기이다. 미·중의 북한 새 지도부 인정과 활발한 접촉 시도 상황에서, 남한은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와 新남북관계 형성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통일비용 논의가 대두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첨부>자료 참조).

1. 북한 정세 동향과 전망

○ (사망후 대내외 동향) 김정은 부위원장의 후계자 지위 승계와 주변국들의 인정 등으로 후계자 지위 승계와 권력 장악이 빠르게 진행

- 북한 내부 동향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김 위원장의 후계자 및 최고 실세임을 공식 인정
 -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장의위원회 서열 1위와 백두혈통 승계의 상징성은 물론, 김 위원장 시신 참배 모습 등에서 최고 권력임을 대내외에 과시
 - 북한 매체들은 그를 당·군·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계승자로 표현했고,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존경하는, 경애하는'이란 존칭 수식어 사용
- 주변국 반응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북한 새 지도부를 공식 인정
 - 중국은 후견인 역할 자처 : 사망 보도 첫날인 19일에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북한이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후진타오 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조문하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
 - 미국도 공식 인정 : 12월 19일에 뉴욕채널을 통한 실무접촉과 클린턴 장관의 평화적이고 안정적 전환(transition)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1일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면서 후계자로 공식 확인

○ (추모기간 : 사후 1년) 포스트 김정일 시대는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으로 권력체제가 조기 안착되면서, 유헌통치가 진행될 전망

- 향후 1년간의 추모기간에는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의 권력체제가 유지되면서, 후견인 그룹과 유헌통치가 뒷받침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
 - 권력 구도는 종전의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으로 변화
 - 정치·군사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유헌통치를 내세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워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면서 국정 운영 예상

○ (추모기간 이후) 체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은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들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지배계층 결속 : 후견인 그룹과 군부, 강경파와 온건·개방파 또는 군부 내에서의 신·구 갈등으로 결속이 미흡할 경우, 권력 장악과 정책 결정에서 대립과 지연 예상
 -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내 친중파와 舊군부 등이 김정남을 내세우면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주민들의 지지 : 내부 통제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으나, 경제난이 지속되면 주민들의 지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경제난이 가중되면 체제 불만 등으로 민심 동요와 탈북 확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계층의 결속 약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 체제 시나리오 >

지배층 장악 주민 지지	지배층, 조기 결속	지배층, 결속 미흡
주민 지지 확보	- 지배력 확립, 체제 조기 안정 - 정책 추진력 확보 : 강성대국	- 지배력 불안, 체제는 유지 - 정책 결정의 대립 및 지연
주민 지지 미확보	- 지배력 안정, 체제 불안 - 내부 통제 치중	- 지배력 불안, 체제 불안 - 내부 단속 강화, 폐쇄성 심화

○ (향후 권력 구도) 김정은이 당 총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권력의 중심은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이동 예상

- 김 부위원장은 당 총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하여 확고한 권력 장악과 최고지도자로의 등극을 대내외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 김 위원장도 김 주석 사후에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자신은 국방위원장에 취임함
 - 이미 최고사령관과 당중앙위원회 수반(총비서 의미)에 오른 것으로 평가
- 북한의 권력 구도는 종전의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이동 예상
 - 2010년 9월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 신설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보이며, 최근의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도 부위원장 명의로 하달됨

2. 김정은 시대 개막과 유훈통치 전망

-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사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와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초점
 - 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시기(1995~98)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 추진과 북핵 합의 도출에 주력
 - **경제 정책** : 종전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서, '먹는 문제 우선 해결'과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송)의 정상화를 강조
 - **외자 유치** : 경제관련 헌법 조항 대폭 개정, 나선 경제무역지대 본격 개발(별도의 나선 포럼 개최, 각종 지대법 제·개정), 두만강개발계획(TRADP) Commission Committee 설립, 관광 부문 강조 등
 - **북핵 문제** :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망 2달 후부터 북미회담을 재개하여 10월에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를 도출했고, 11월에는 핵동결을 선언
 - **남북 관계** : YS 정부시절의 조문 파동으로 급냉하여 경색 국면이 지속

- (김정은 시대의 정책 기조)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내부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훈통치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완전한 권력 장악과 내부체제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군사도발보다는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기존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기대
 -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 문제와 남북 관계를 '분리적용'할 가능성 존재

- (유훈통치 전망) 정치·경제적으로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문제는 체제 안전과 에너지 제공 요구 등의 추진이 예상되며, 유훈통치 기간은 지난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

- **정치·군사 분야** :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군 우선의 선군 통치가 불가피
 - 김정은의 공식 직함은 인민군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도 부위원장 명의로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 이는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책 총괄과 군대 지휘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조정권까지 행사하는 핵심기구이며, 김 부위원장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출신으로 포사격술에 관심이 많은 포병 출신임
 - 그러나 완전한 권력 장악 후에는 당을 통한 지배로 노동당 중심 복귀 예상
- **경제 정책** : 2012년의 강성국가 진입 목표 자체도 중요하나, 체제 유지와 인민들의 영도를 위해선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과 중장기 비전 제시가 절대 긴급
 - 2011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총143회로 경제 59회(41.3%), 군사 39회(27.3%), 대외 16회(11.2%), 기타 29회(20.3%)로 경제 부문에 치중함
 -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인 개혁·개방 확대 추진 예상
 - 김 부위원장은 이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CNC(컴퓨터제어기술)을 중심으로 첨단화, 과학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역점 전망
 - 특히 후견인 그룹의 장성택(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황금평·나선 개발 등을 주도, 2002년 경제시찰단으로 서울 방문)과 김정희(경공업부장), 김양건(대풍그룹 이사장) 등은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 분야에 큰 관심
 -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 정치·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부위원장의 유헌통치 정책 전망 >

	주요 방향	세부 내용
정치	선군정치	- 군과 당 중심의 권력 구도 유지(당 중앙군사위원장 취임)
경제	강성대국 진입	- 외자유치·북중경협 확대(황금평, 나선 개발 등)
		- 경제특구 추가 확대
북핵	한반도 비핵화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이행
		-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평양 10만호 건설 등
대외	실리 균형 외교	- 자립민족경제 건설(철·비료·섬유의 주체생산체계 구축)
		- 6자회담 및 비핵화 노력 재개
대남	평화협정 체결 남북공동선언 이행	- 평화적 핵개발 이용 주장 (경수로 건설 요구)
		- 북중 관계 강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 중·러와 줄달리기의 실리 외교 추구
		- 주도권 우위 경쟁 속에 남북 경색 해소 노력
		- 남북경협 확대로 민족사업 발전(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 **북핵 문제** : 대외 원조 확보와 북미 관계 개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 등을 위해 2012년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
 - 2012년은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기로, 각국들은 자국의 국내 현안이 우선 해결 과제여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북한 역시, 동북아의 새판짜기가 가시화될 때까지 국제도발에 신중 예상
- **남북관계** : 우리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나, 북한의 내부 체제 강화와 강경 이미지 부각 등을 위해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색 국면 지속 예상
 - 남한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넘는 정책 전환의 명분을 찾기 어렵고, 북한 역시 체제 단속과 위기 관리 차원에서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해 대남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 존재
 - 더욱이 정권 교체에 따른 남한의 남북공동선언 불이행에 대한 학습효과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제안이 없는 한 남북간 새로운 기싸움이 시작될 전망

○ (유훈통치 비교) 김 주석과 김 위원장 사후의 북한 경제 여건과 현안이 유사한 만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과 외자유치 기조는 유지 예상

- 김 부위원장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기조 하에, 이전의 '먹는 문제 우선 해결'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정책이 초점을 전환 예상
- 단, 체제 조기 안착과 비전 제시를 위해 유훈통치 기간은 1년으로 축소 전망

< 유훈통치 비교 >

	김일성 사후	김정일 사후
통치 기간	- 3년 (1994.7~97. 7) - 주석직 폐지, 3년후 총비서 추대(97. 10)	- 1년 이내 예상 (2012) - 당 중앙군사위원장 취임 전망
경제 상황	-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제 붕괴 ⇒ 먹는 문제 해결에 초점	- 북중 경협 급증, 장마당 허용 ⇒ 경제강성대국 건설 진입 노력
정책 기조	- 주체사상 기조 유지	- 선군정치, 강성대국 기조 유지
경제 정책	- 대외지향적 정책과 나선지대법 개정 - 농업과 기간산업 정상화 치중	- 나선·황금평 개발, 경제특구 확대 -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강조
북핵 문제	- 한반도 비핵화 노력 지속 - 제네바 핵합의 도출	- 6자회담 및 비핵화 노력 재개
대외 정책	- 대외관계 개선 노력	- 북중 관계 강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 조문 문제로 남북관계 급냉 - 3년간 경색 국면 지속	- 민간 조문 허용 - 경색 국면 해소 노력

□ 시사점과 남북 관계 개선 방향

○ (시사점) 2012년은 전환기적 시기이므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 관계 방향 설정의 기회로 활용

-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이해당사자요 해결의 주도자적 입장에서의 접근
 - 미·중의 북한 새 지도부 인정 및 활발한 접촉 시도 상황에서,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북한 정치·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면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실리 균형외교 전략이 필요
-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과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새 지도부와와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등을 통한 대화 채널 확보 노력이 필요
 - 의제는 우리 정부의 명분 확보와 북측의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분리 접근하는 대승적 접근 자세가 요구됨(남북 간의 소통과 대북 정책의 유연성 제고 노력)
 - 예컨대, 인도적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금강산관광 제안,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개성공단 사업 확대 조치),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연계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 등을 우선 고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첨부자료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추정

1. 통일비용의 추정

- (개요) 목표소득방식을 적용하여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추정
 - 통일비용의 추정 대상은 경제적 분야로 한정하며, 그중에서도 대북 SOC 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비용 등의 남한의 대북 투자비용만을 목표소득 방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함¹⁾
 - 현재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의 여건 및 낙후된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최소 목표소득을 3,000달러로 설정한 후, 추가적으로 7,000달러, 1만달러 달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
- (추정방법)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 산출을 위해 한계자본산출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를 적용하여 추정
 - 한계자본산출계수는 생산량 1단위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가를 목표소득과 한계자본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함
 - 한편, 자본산출계수는 한 국가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생산요소의 생산성과 경제 흡수 능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단기간 내에 큰 변동이 없어 과거 남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경제성장은 과거 비슷한 소득 수준에 있었던 1970~80년대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
 -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7년 1,012달러에서 10년 만인 1987년에 3,110달러로 늘어났고, 15년 만인 1992년에는 7,007달러로, 18년 만인 1995년에는 11,432달러로 증대

1) 대북 SOC투자 및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 투자비용은 북한 주민의 소득증가와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의 가장 직접적 방안의 하나일 뿐 아니라, GDP는 한 국가의 총괄적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이를 목표소득 방식으로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삼았다.

< HRI 통일비용 추정 방법 개요 >

구분	내 용
추정 방법	- 목표소득방식
추정 기준	-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올리는 데 드는 남한의 경제적 투자 비용 · 7,000달러와 1만달러도 추가적으로 추정
계산 방법	$[(\text{목표소득} - \text{통일시점 소득}) \times \text{북한인구}] \times \text{한계자본산출계수}$
주요 가정 (통일 시점)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 - 북한의 인구는 2,500만명 - 자본산출계수는 3.14적용(남한 1970~80년대 평균치) - 통일후 북한 경제성장은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름

①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3,000달러 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향후 10년간 1,5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북한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할 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는 데 10년 소요
- 통일시점에서의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은 1,000달러, 북한 인구는 2,500만 명으로 가정
- 한계자본산출계수는 남한의 과거 국민소득을 기초로 1970년대(2.72)와 1980년대(3.56)의 평균치인 3.14를 적용 (한국은행 추정치 적용²⁾)
- 따라서 목표소득과 통일시점의 소득차액(2,000달러)과 북한 인구(2,500만명)에 한계자본산출계수(3.14)를 곱하면 1,570억달러

$$\text{통일비용} = [(\text{목표소득} - \text{통일시점의 소득}) \times \text{북한 인구}] \times \text{한계자본산출계수}$$

2) 현재 북한의 낙후된 경제 사정과 산업구조 및 주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자본산출계수는 이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에 걸쳐 남한의 경제성장 추이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1970~80년대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②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7,000달러와 1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4,710억달러, 7,065억달러임

- 통일 이후 북한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할 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7,000달러와 1만달러가 되는 데 각각 15년과 18년이 소요
- 각각의 통일비용은 남한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의 추정치이며, 정부의 재정 지출과 민간 차원의 투자를 모두 포괄한 것임

< 북한 1인당 목표소득별 통일비용 >

목표소득	3,000달러	7,000달러	1만달러
통일비용	1,570억달러	4,710억달러	7,065억달러
소요기간	10년	15년	18년

2. 통일편익의 추정

- (개요) 경제적·비경제적 통일편익 중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편익 중에서도 대북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와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
- 우선 통일비용의 대북 투자로 남한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목표 소득방식으로 추정함으로써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 방법의 일관성 유지
- 대북 투자를 통한 남한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국민총소득(GDP)에 상당 부분 반영되므로, 통일비용 투자에 따르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
- 다만, 이는 투자에 따른 생산증대(부가가치) 효과만을 고려하므로 **통일에 따른 절감효과**를 통해 보완하며, 이는 **국방비 감축 효과**와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를 항목별로 추정하여 합산
- 특히, 국가위협도 감소 효과는 외채상환이자 부담 절감액을 통해 추정하며, 이는 통일이후 리스크 프리미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데 근거함

< HRI 통일편익 추정방법 개요 >

구분	내 용
추정 방법	- 목표소득방식을 주로 하되, 항목별 추정방식을 추가하여 보완
편익의 정의	- 통일후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비용을 투자할 경우 남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생산 효과에 국방비 절감액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를 추가 · 통일편익 =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 남한의 국방비 절감액 +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계산 방법	- 부가가치유발효과 : 통일비용 × 부가가치유발계수 - 국방비 절감액 : 국방비(현재수준) - 국방비(독일감축비율 적용) ※ 독일의 경우, 통일전 서독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였으며, 통일 이후 10년간 1.5%수준으로 감소 -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 대외채무액 × 리스크 프리미엄 ※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80~100bp이며, 한국은 100~120bp로 선진국에 비해 약 20bp 높은 수준
주요 가정	- 국방비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같은 수준(1.5%)으로 감축 -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통일후 10년만에 3,000달러 도달 - 대북 투자시 원자재와 기술인력은 대부분 남한에서 조달 - GDP대비 외채비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해외조달금리가 약 20bp 인하

- (추정 방법) 통일비용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독일 국방비 감축 비율을 적용한 국방비 절감액, 그리고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채상환이자 부담 경감액을 추정하여 합산

- ① 부가가치유발 효과 :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통일비용의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³⁾
-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남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
 - 2008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66이며, 앞서 추정한 통일비용을 곱하여 통일비용의 북한 투자시 남한 산업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
 - 다만,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적 효과는 20%포인트 절하된 값으로 조정

3) 한국은행은 대북 SOC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박석삼, 『대북 SOC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0. 9

$$\text{부가가치유발효과} = [\text{대북 경제적 투자비용} \times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times \text{실제 경제적 효과 (80\%)}$$

② **국방비 절감 효과** : 남한이 현재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통일 이후 감축될 경우와의 차이를 추정

- 통일전 GDP 대비 국방비는 서독이 2.5%였으며 통일 10년 후 전체 독일의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감축⁴⁾
- 2009년 현재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8%이며, 이 비율이 유지될 경우 국방비와 통일 이후 독일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의 국방비의 차액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합산

$$\text{국방비 절감 효과} = \sum (\text{분단 유지시 연도별 국방비} - \text{통일후 국방비})$$

- ※ 분단시 국방비는 현재 남북한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남한: 2.8%)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액수임
- ※ 통일후 국방비는 남한의 국방비가 10년에 걸쳐 GDP 대비 1.5%에 이르도록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된 액수임

주 : 남한의 향후 GDP추정치는 골드만삭스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의 추정 자료 이용

③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통일 이후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르는 외채 상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추정

- 2010년 10월 현재 한국의 GDP대비 외채 비율은 4.44%로 추정되며, 이 비율이 통일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로 선진국 수준으로 해외차입 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보다 약 20bp(0.2% 포인트) 절감 효과 발생
- 2010년 현재 선진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80~100bp이며, 남한의 경우는 100~120bp임

$$\text{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 \sum(\text{연도별 GDP대비 외채규모}) \times \text{외채상환금리 인하 효과(0.2\%)}$$

4)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④ 기타 편익 :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

- 개성공단 등 북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 2010년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90.5달러로서 한국의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인 2,060달러(230만원)와 비교할 때 약 23배의 차이
-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의 고용 증대로 제조업과 기타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북한 내 관광 자원의 활용 및 개발을 통한 관광 수입 증대 효과

- 금강산, 개성 등 기존 관광지역을 활성화하고 백두산, 묘향산 등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관광 수입이 증대
-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생태·평화 공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수익의 증대가 예상

-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한 해외 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

-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약 7,000조원으로 평가되며, 200여종의 광물자원 가운데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은 20여종에 이룸⁵⁾
- 특히, 철광석,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 뿐 아니라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및 희토류인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개발로 자원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

- 남북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 인프라의 개발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

- 남북한 교통망과 TCR(중국), TMR(몽골), TSR(러시아) 등 북방 지역으로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 통일 이후 한반도는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미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하게 될 전망

5) 2010. 10. 11.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국정감사 자료

3.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종합) 경제적 부문에서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추정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후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달러보다 약 630억달러 많은 2,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또한 7,000달러와 1만달러 목표에 있어서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각각 650억 달러, 1,300억달러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통일은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편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비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통일 비용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감소하게 됨
 - 통일로 인한 각종 경제적 편익 외에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비경제적인 통일편익까지 고려할 때, 통일비용 대비 통일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

(단위 : 억달러)

목표소득		3,000달러 (10년)	7,000달러 (15년)	1만달러 (18년)
통일비용(A)		1,570	4,710	7,065
통일편익(B)	부가가치 유발	836	2,509	3,764
	국방비 절감	1,226	2,623	4,245
	국가위험도 감소 (외채조달비용절감)	135	230	341
	소계	2,197	5,362	8,350
통일 순편익(B-A)		627	652	1,285

주 : 통일편익(B)에는 통일 후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의 기타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음

< 통일비용 비교표 >

작성기관 (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추정방법
현대경제연구원 (2010)	-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 1,570억 달러	목표소득방식
미래기획위원회 (2010)	2011	(점진적) 3,220억 달러 (급진적) 2조 1,400억 달러	-
전경련 (2010)	-	3,500조원	전문기설문조사
조세연구원 (2008)	2011	(통일후 10년) 남한 GDP 7~12%	-
한국은행 (2007)	-	5,000억~9,000억 달러	목표소득방식
랜드연구소 (2005)	-	500억~6,670억 달러	목표소득방식
골드만삭스 (2000)	2000 2005	7천700억~3조 5천억 달러	목표소득방식

자료 : KDI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북한경제리뷰』 2010.

양운철 “통일비용의 추정과 자원 조달 방안”, 『세종정책연구』 2006과 해당 보고서 참고.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위원 (2072-6223, csk01@hri.co.kr)